

\_\_\_\_\_

## 1. 여행개요

여행목적	'15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의 반부패 교육훈련								
여행동기 및 배경	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기관 담당자에 대한 국제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청렴정책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※ 2016년도 반부패 청렴업무 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계획 통보 (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-791호, 2016.3.16.)								
여행기간	'16. 4. 20. ~ 4. 28. (7박 9일)								
여행국 (지역)	오스트리아 비엔나								
방문기관	국제 반부패아카데미(International Anti-Corruption Academy)								
여행자	소 속	직급	성명	성별	연령	여행중 담당업무	여행경비		
							금액	부담기관	
여행자	감사실	5급	박○○	여	32	국제적 반부패업무 동향 파악 및 기관간 청렴업무 정보 교류			우리원
동행 기관명 및 인원	총 26명 (국민권익위원회 4명 및 '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기관 담당자 22명)								

## 2. 여행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방문예정인물 (직책포함)
4.20(수)	인천	비엔나	-	○ 인천 → 오스트리아 비엔나	-
4.21.(목)	비엔나		국제반부패 아카데미	○ 부패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 등 자료 수집 ○ 최근 부패환경 현황 파악	
4.22.(금)	비엔나		국제반부패 아카데미 경제·부패전담 검찰청	○ 공공 조달, 취약점 및 모범 사례 수집 ○ 오스트리아 검찰청 방문을 통한 범죄와 부패현황 파악	
4.23.(토)	비엔나		-	○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방안 강구	
4.24.(일)	비엔나		-	○ 방문기관 사전 조사 및 타 기관과의 부패방지 업무관련 정보교류	
4.25.(월)	비엔나		국제반부패 아카데미 반부패 기관인 내무부 부패방지국	○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등 관련자료 수집 ○ 오스트리아 부패방지국 방문을 통한 도입 가능한 정책내용 탐구	
4.26.(화)	비엔나		국제반부패 아카데미 UN 마약범죄국	○ 사기방지 도구 및 개념 이해 ○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	
4.27.(수)	비엔나		국제반부패 아카데미	○ 조직의 청렴성 등 현황 파악 및 내용 정리 ○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강의 수료	
4.28.(목)	비엔나	인천	-	○ 오스트리아 비엔나 → 인천	

### 3. 업무수행내용

#### <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내용 >

##### ① 부패의 일반적 개념 (Mr. Martin Kreutner)

- 부패의 정의 : 사익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



- 부패로 인한 손실

- 지역별 : 아프리카 GDP의 25%, 아시아 GDP의 17%, 유럽 GDP의 6~7%
- 계약부문 : 민간 총 계약금액의 약 15%, 공공 총 계약금액의 약 25%
- ※ 공공계약이 민간계약보다 부패로 인한 손실이 큰 이유?

①고액 ②독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③비공개계약

- 부패발생의 3요소

- ① 권한을 위임한 주체(국가, 회사 등)
- ②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(공무원, 직원 등)
- ③ 어떤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객체(법규 위반 운전자, 인사청탁자 등)

- 최근 반부패 흐름

- 과거 법집행 및 처벌 위주에서 최근에는 예방, 교육, 처벌, 준수 4단계 관점으로 체계적 대응
- 반부패 개념을 존중, 윤리, 정직, 도덕성 관점에서 접근
- 부패가 국가 안보, 인권 침해, 테러 등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지

## ② 부패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-UNCAC (Mr. Godwin Oche)

- 부패가 성립되는 환경

기회 - 개인의 청렴성 - 책임성 = **부패**

독점 + 재량 - 책임성 = **부패**

- 부패 3요소 : 기회, 합리화, 압력(가정 문제 등)
- 우리나라 부패관련 지수 및 순위

TOOL	RANK	SCORE
부패인식지수(2015)	37/168	56/100
뇌물공여지수	15/28	7.9/10
금융비밀주의	28/71	54/100

- 부패의 영향
  - 모든 나쁜 것들을 대표하며 발전을 저해하고, 모든 사회악의 원인
  -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는 특히 부패영향이 심각
  - 경제적 부담(손실), 법(제도) 정비 필요
- 국제 반부패 에이전시 모델
  - 홍콩모델(가장보편적) : 방지, 조사, 교육
  - 싱가포르모델 : 조사에 초점
  - 호주모델 : 방지에 초점
  - 미국모델 : 많은 수의 기관들이 연계
- 반부패의 노력
  - UN 반부패 협약\*, OECD 뇌물방지 협약 등 반부패 협약
    - \* 예방, 범죄화 / 법집행, 기술적 지원, 국제적 협력, 자산 회복
  - 국제 사회단체 : TI, UNCAC 연합 등

### ③ 공공 조달분야의 부패위험 (Mr.Johannes Schnitzer)

- 공공조달 : 정부구매(상품, 서비스, 용역 등)를 수행하는 체계
  - 공공조달(공적계약)은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이므로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통해 계약할 필요성이 있다.
- 공공조달 부분의 규모
  - 전 세계 : GDP의 15%~30%의 규모
  - EU : 전체 GDP의 18%(약 2,400백만유로)
  - 미국 : 약 4,500억달러 규모
- 공공조달의 부패
  - 공공조달에서 부패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공공조달 금액의 25%
  - 오스트리아는 매년 공공조달 금액 500억 유로 중 50억 유로가 공공조달의 부패로 인해 손실
- 공공조달 부분의 추진 절차
  - 1단계(입찰 전)
    - a. 정부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요구되는 기술 등을 확인하고 결정
    - b. 입찰시간대, 입찰자의 수, 평가 방법 등의 계약과정 구조화
    - c. 예산의 수반
  - 2단계(입찰단계)
    - a. 입찰 서류 및 입찰 평가서
    - b. 개찰 및 입찰자를 평가하여 계약 당사자를 선정
    - c.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성립
  - 3단계(입찰 후) : 계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행위
- 공공조달의 계약조건 등 기준 수립 시 고려사항

- 예정가격, 응찰자 수, 서비스 및 공사의 복잡성 등 고려필요
- 세부기준은 특정입찰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부패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

#### ○ 공공조달의 종류

- 공개경쟁입찰, 제한경쟁입찰, 협상에 의한 계약, 독점 공급으로 분류
-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독점 공급은 부패의 위험도가 높고 특히 독점 공급은 더욱 부패 개연성이 있음

#### ○ 공공조달의 주요 부패유발 요인

- 뇌물 제공자(응찰자, 컨소시엄파트너, 하도급자, 공급자)
- 뇌물 수령자(공공조달의 담당자 등 공공조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)
- 그 외 공공조달 관련 공무원이 연관되지 않아도 입찰 당사자 간 비경쟁(담합)을 통해 예정가격 및 입찰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부패 발생할 수 있음

#### ○ 국제적 부패방지 장치

- 국제 상거래 모델법 : 법적 구속력 없음
- WTO 협약 : 구속력 있음
- EU 공공조달 지침 : EU 국가의 지역적 법의 일부
- UN 반부패협약 : 국가적인 반부패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공

#### ○ 공공조달의 부패방지 필요조건

- 훌륭한 법 제도의 완비
- 4-eyes principle(상호 견제 및 내부통제)
- 부정부패가 발생 되더라도 자정(自淨)의 제도화

- 규제준수 프로그램
- 공공조달 관련 전문가 배치
- 투명성, 경쟁, 차별금지, 경제성과 효율성, 객관성 등 필요
- 국제적 부패방지 장치
  - 국제 상거래 모델법 : 법적 구속력 없음
  - WTO 협약 : 구속력 있음
  - EU 공공조달 지침 : EU 국가의 지역적 법의 일부
  - UN 반부패협약 : 국가적인 반부패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공

#### ④ 사기 예방 (Georg Krakow)

- 사기(Fraud) :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
  - 사기에 있어서 이익이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이익 (특채 등)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내포
- 사기의 형태
  - 위조, 횡령, 조달과정에서 부패, 문서조작, 자금세탁,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
-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기 형태
  - 세금 : 탈세
  - 계약 : 계약 전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음
  - 사회보장 : 연기금, 의료보험, 실업수당, 출산수당 등
  - 공공보조금 : 문서위조 등을 통한 보조금 지급 등
- 사기 발생의 3요소 : 동기, 기회, 합리화
- 실제부패 사례를 통한 딜레마상황 등 대응방안 검토

## ⑤ 반부패 정책과 측정에 관한 비교연구 (양종삼)

- 우리나라의 현 반부패 수준 : 일제 강점기 및 1970~80년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 전개 중
  - 2002년 : 반부패 조직 설립
  - 2003년 : 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도입
  - 2008년 : 국민권익위원회 설립
  - 2010년 :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
  - 2015년 : 청탁금지법 제정 추진
-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평가 등 국제사회 평가는 아직까지 낮은 편
- 반부패 기본 개념 : 제도화 · 교육 ↔ 실행 ↔ 관리 · 점검 ↔ 처벌
- 반부패 정책 추진 기본 방향
  - 정년보장, 연금, 보수, 휴가, 자존감 등 보장을 통한 보상강화도 부패 예방의 방안이 될 수 있음
  -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 하고, 복지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부패 감소 가능
-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
  -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개념
    - 법적인 정의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패를 인식하고 있으며,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부패로 확장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
  - 금품 수수 등 부패개념
    -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및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
    - 뇌물 : 현금, 선물, 향응, 미래 취업 보장 등 포괄적 개념



- 사기 : 허위로 재정적 이익을 얻는 행위
- 횡령 : 주어진 책임하의 돈이나 다른 자산을 훔치는 행위
- 예산 남용 :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적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등
- 자금세탁 : 불법적으로 획득한 현금이나 자산을 옮기며 출처를 감추는 행위
- 공모 : 2사람 이상이 횡령등을 공모하거나 공적 조직을 기만하는 행위
- 권한남용 :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위, 권한,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

#### ○ 부패 분야에 대한 비교

-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 :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.3점으로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4.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 만연

#### ○ 해외 선진국의 부패 인식 수준

- 우리나라에 비하여 엄격한 수준에서 부패 개념이 형성되어 있으며 공·사 구분이 비교적 명확
  - 선물 : 미국 1회 20달러, 연간 50달러 수수 파면
  - 공용품 : 커피, 복사, 교통편의 등 자비 부담 문화
  - 사적 심부름 : 허용 불가

#### ○ 국제 투명성기구의 CPI와 국내 청렴도 조사 비교

- TI의 CPI 인식도 조사와 비교 시 국내 청렴도 측정이 비교적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음

구 분	CPI	국내 청렴도 측정
방 법	설문	설문, 통계
설문 대상	기업인, 언론인	국민, 언론인, 공직자, 외국인
측정 크기	100~200명	250,000명
질문 유형	인식	인식, 경험, 행정 절차
감정 요인	기업인의 인식도	연간 부패 경험

-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조사 결과
  - 공무원(3.3)에 비하여 민간기업(3.2)의 부패인식이 낮게 측정됨, 94%의 국민이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
-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 검토
  -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은 OECD 국가중 22위로 GDP의 26.8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(그리스 24위 27.5%)
    - \* 지하경제 : 장물, 마약거래, 매춘, 밀수, 뇌물 등 불법적 활동과 상속세 탈루,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등 포함
- 조달, 계약분야에서의 부패 개념 변화
  - 부패 방식의 고도화 : 과거 현금, 상품권 수수에서 채취업, 카드 지급, 스폰, 해외출장, 평가위원 선정 등으로 은밀화
  - 부패 집단의 연대화 : 입법부, 언론사, 기업, 행정부, 사법부, 여론 선도계층 등 사회 지도층의 학연, 지연, 결혼 등의 연대 추세
  - 부패 처벌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일반국민의 사회적 신뢰 저하는 물론 출산률, 공무원시험 열풍, 여론 조작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부패 감시 및 개선 필요

## ⑥ 윤리경영 및 청렴정책 구조(Mr. Jeroen Maesschalck)

### ○ 윤리와 청렴의 정의

- 윤리 : 문화에 따라 다르며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행동양식
- 청렴 : 행동의 기준에서 반부패 요소를 고려하는 것

### ○ 윤리 딜레마와 윤리경영

- 윤리 딜레마 : 다양한 가치가 대립되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
- 윤리경영 : 조직원의 윤리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

### ○ 윤리경영의 두 가지 관점

구분	규정중심	가치중심
차이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지</li> <li>- 비판적인 관점의 인간성 바탕</li> <li>- 각각의 상황별 규정 강조</li> <li>- 대표사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률 및 규정</li> <li>· 엄격한 행동강령</li> <li>· 엄격한 절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윤리적인 행동 독려</li> <li>- 긍정적인 관점의 인간성 바탕</li> <li>- 개인별로 관리</li> <li>- 대표사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워크숍 및 교육훈련</li> <li>· 포괄적 윤리강령</li> <li>· 개인별 코칭</li> </ul> </li> </ul>
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정 내역 방대화로 효율성 ↓</li> <li>- 규정간 해석의 모순 발생</li> <li>- 개인의 창의성 저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괄적 해석으로 악용 가능성 ↑</li> <li>- 상황별 기준 차이로 혼란 야기</li> <li>- 내재화 시간이 오래 걸림</li> </ul>

- 윤리경영은 규정중심과 가치중심 관점 중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

### ○ 청렴관리 구조

- 4가지 기능
  - 청렴을 규정하고 정의함 : 위험분석 및 윤리강령 등
  - 청렴의 기준을 전파함 : 교육훈련 및 코칭, 의사소통 등
  - 청렴성 모니터링 : 내부신고 지침, 설문조사 등
  - 청렴 기준 집행 : 인허가 및 징계 집행

## < 방문기관 주요 내용 >

### ①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 전담 검찰청(WKStA) 방문

#### □ 기관 소개

- 설립목적 : 경제범죄와 부패 수사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전문 검찰조직
- 조직 : 1명 소장, 8개 팀으로 구성
- 인력 : 검사 25명, 경제전문가(회계사) 6명, IT전문가 1명, 대변인 1명
- 주요기능
  - 부정부패, 경제범죄,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·기소·상소
  - UN 반부패기구, EU 반부패 전담기구와의 협력

#### □ 연혁 및 관할 범위

- '09. 1. 1. :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발족
- '11. 9. 1. : 경제사범 및 경제범죄까지 관할범위 확장
- '12. 9. 1. :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, 사기관련까지 관할범위 확장

#### □ 권한

- 관 할 권 : 오스트리아 전체 주민
- 수사대상 : 3,000유로 이상의 부패사건(공공, 민간), 5백만유로 이상의 경제범죄(중대사기, 횡령, 금융사기)에 대하여 수사
  - \* 수사대상 사건은 WKStA로 이관되어 수사하고 공익 및 정치 관련 500만 유로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음
- 수사권한
  - 관련기관에 자료요청, 지시 권한 보유
  - 증권금융감독원, 연방 부패방지국(BAK), 세금관련부서, 재정부, 감사원, 회계사 등과 협력하여 수사

○ 기능 및 성과

- 사건조사, 이행, 기소, 항소, 반부패 국제협력
- 2015년도에 1,200건의 부패사건을 신고 받음

□ 공익·부패 신고 웹사이트(<https://www.bkms-system.net/bkwebanon/report/>)

○ 구축배경

- 부패사건의 경우 금품수수나 공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,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음
- 부패방지를 위하여 내부고발 등 새로운 신고시스템이 필요하여 익명신고시스템을 2013년부터 개설 운영 중

○ 신고시스템의 특징

- 인터넷 접속, 무기명 신고 가능(IP주소 추적 불가)
-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 가능, 독일어/영어 2개 국어 제공
- 6개 분야로 구성 : 부패, 경제범죄, 사회보장, 금융, 회계·주식, 자금세탁
- 검찰과 익명신고자간 추가 자료 요구 및 질의 응답 등 커뮤니케이션 창구 기능도 있어 신고조사에 대한 보조 역할 가능

○ 한국 공익신고 게시판과 비교

- 한국 공익신고 게시판은 익명, 실명 둘 다 가능하나,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두 익명으로만 접수
- 한국과 달리 신고보상금 등 보상이 전혀 없음

\* 오스트리아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, 혹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굳이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신고를 잘함. 또한 보상금 지급시 익명성 보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.

## ② 오스트리아 부패방지국(BAK) 방문

### □ 기관 소개

- 설립 : 2010년
- 역할 : 오스트리아 반부패 전담 기구
  - 내무부 경찰청 소속 독립기관
  - 지방 조사사항은 위임, 공공부문 400여건/1년 사건 처리
- 주요 역할 : 반부패 경제사범(검찰청)과도 연관되나 형사 사건 조사
  - 공무원 직권남용 대상, 뇌물사건, 정보보안 침해행위, 자금세탁
  - 50%의 사건은 반부패 경제 검찰과 협업
- 기타 : 부패방지 교육업무, 사건 조사 수행

### □ 주요 활동 및 교육

- 국가적 반부패 전략계획 수립
- 부패조사, 정보수집, 부패방지, 예방대책 관련 교육
- 컨설팅 서비스, 기존 사건 조사 분석
- 반부패·청렴 강의, 세미나, 국제전문가 포럼, 리플릿 제작
- 연 2회 특별 교육(반부패의 날(4월) 등)
- 윤리교육 및 상담(부패방지 관계공무원 등 28,000여명)
  - 연 평균 1,734명 / 심화학습 252명/연
  - 공공서비스, 민간분야, 해외 관계자 1,000여명 교육
  - 내부 청렴교육(중사, 순경, 경찰관)
  - 청소년 청렴교육(14~18세)
  - 기타 국제적, 지역, 시장, 시청, 내부, 감사, 민간인 교육
  - 모바일(아바타 활용, 부패 시나리오별 체험 등) 콘텐츠 개발 등

## □ 민관 협력 활동

- 세계 각국(다자간) 협력체계 유지
  - UNCAC 이행사항 협조, EU 및 OECD 반부패 거버넌스
- 정보 공유 및 형사사건 등 향후 반부패 연계 사건 협업
  - Paper Company 등 조세회피 목적의 부실회사 조사 공조
- 오스트리아 국제기구 유치 계기(정부실패에 대한 보완 차원)

### 《 방문 사진 》



### ③ UN마약범죄국(UNODC) 방문

#### □ 기관 소개

- 설립목적 : 전 세계적인 부패, 불법마약유통, 범죄예방 및 범죄사범, 국제테러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('97년, 오스트리아 비엔나)
- 조직 : 1개 본부(집행국장실 외 4개과), 2개 연락사무소, 21개 지역사무소  
\* 4개과 : 기획집행과, 조약과, 정책분석협력과, 운영예산과
- 인력 : 약 550명
- 주요기능 : 부정부패, 조직범죄, 인신매매, 테러방지 활동, 약물 규제 및 마약범죄 예방
- 관련협약 : 국제조직범죄협약('00년), UN부패방지협약('03년)

#### □ UN 반부패 협약 개요

- 부패는 세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세계화 되면서 국가 간 자금 세탁 등으로 국경 없이 확산 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대두
- 국제 협력을 통해 부패위험성을 인식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 기준 통일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2003년 반부패 협약 발표
  - 현재 178개국이 반부패협약에 참여하는 등 국제 사회가 부패 척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,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 - UNODC는 반부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 및 계획 검토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
-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에 조인하였고, 2008년 2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식 당사국으로 참여 중



## □ UNCAC 세부 내용

### ○ 주요 구성

- 부패방지, 부패의 범죄규정 및 법집행, 국제협력, 자산회복 등 주요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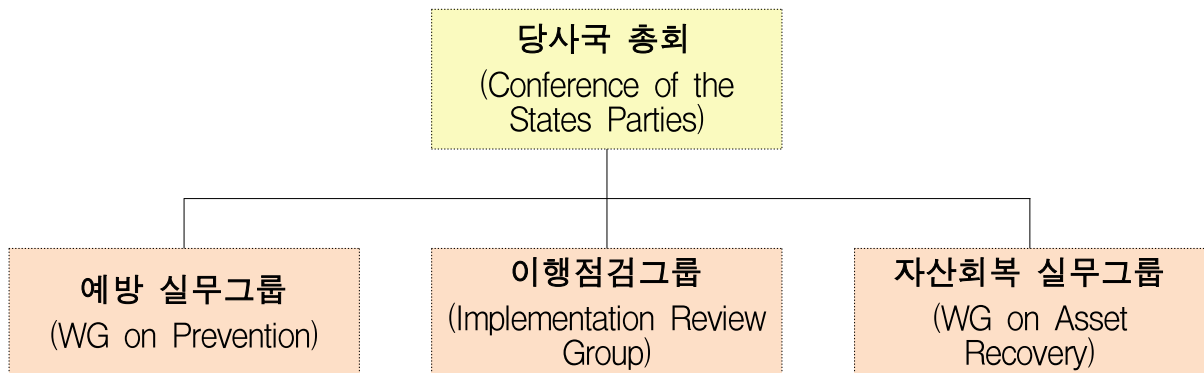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요 내 용
제2장 예방조치 (제5조~제1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</li> <li>○ 부패방지기구 설립</li> <li>○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</li> <li>○ 공무원행동강령</li> <li>○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</li> <li>○ 공공보고</li> <li>○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</li> <li>○ 민간부문의 부패방지</li> <li>○ 사회의 참여, 자금세탁방지</li> </ul>
제3장 범죄화와 법집행 (제15조~제4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</li> <li>○ 외국공무원 및 국제공공기구 직원의 뇌물수수</li> <li>○ 공무원의 횡령, 착복 및 기타 유용</li> <li>○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</li> <li>○ 직권남용, 부정축재</li> <li>○ 민간부문의 부패, 민간부문 횡령</li> <li>○ 범죄수익의 세탁, 은닉, 사법방해</li> <li>○ 법인의 책임</li> <li>○ 공범 및 미수</li> <li>○ 범죄구성요소, 시효, 기소·선고·처벌, 동결·몰수·압류</li> <li>○ 증인 및 피해자의 보호, 신고자 보호</li> <li>○ 부패행위의 결과, 손해보상</li> <li>○ 특별 당국, 법집행당국과의 협력, 당국간의 협력, 사적 부문과 국가당국 간의 협조</li> <li>○ 금융비밀, 범죄기록, 관할권</li> </ul>
제4장 국제협력 (제43조~제50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협력</li> <li>○ 범죄인 인도, 수형자 이송</li> <li>○ 사법공조, 이관, 법집행 협력, 합동조사, 특별수사기법</li> </ul>
제5장 자산회복 (제51조~제5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적 규정,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</li> <li>○ 재산의 직접 회복</li> <li>○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체계,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, 특별협력</li> <li>○ 자산의 처분과 반환, 금융정보기관</li> <li>○ 양자·다자 협정 및 약정</li> </ul>

구 분	주 요 내 용
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(제60조~제6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훈련 및 기술지원</li> <li>○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·교환과 분석, 기타조치</li> </ul>

## □ UNCAC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검토체계

### ○ 검토 체계 개요

- 협약 당사국 간 지속적 총회의 개최(2006~2015)를 통하여 반부패 정책관련 정보교환, 추진방안 마련, 실행력 검토 등의 활동을 전개
- UN부패방지협약(UNCAC) 관련 조약기구 구조



### - UNCAC 이행 검토체계

- 협약 준수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준수방안 및 공개여부 결정

### - 점검 단계(Phases of the review)

- 자가진단(Self-assessment) : 포괄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
- 서류검토(Desk review) : 해당 점검국
- 점검대상 국가와 점검국 간의 대화(전화, 메일 등)
- 방문 심사
- 결과보고서 산출

\* 요약보고서는 공개, 전체보고서는 점검대상국가에서 공개여부 선택

《 방문 사진 》



#### 4. 여행성과 · 시사점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

- 국제투명성기구 등 세계 여러국가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고, 놀라웠음.
-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관심을 가지며, 우리원의 부패방지 추진계획과 접목하여 적극 추진 필요
- 또한, 한국의 반부패·청렴 제도가 다른국가에 비하여 선진화됨을 직접 느낄 수 있어 자부심을 느꼈으나, 선진화된 제도의 변화에 국민성 및 청렴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음.
- 우리 기관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등급이나 청렴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대책 및 노력 필요
- 임직원의 청렴의식 수준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반부패업무 담당자로서 더 노력하고 다양한 청렴활동을 발굴해야 함을 느꼈으며, 규정 및 처벌중심에 맞추기보다는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,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봄
-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1등급이 목표가 아닌 방법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청렴활동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함을 또 한번 느낀 국외교육이었음.
- ※ 국외교육 이후 “청렴 관련 국제적 동향 이해”라는 교육으로 임직원과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22개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전파 교육을 실시함.